

전주시-시의회 노사민정협의회 개최

고용노동부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 계획·생활임금 활성화 토론회 등 진행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노동계와 경영계, 민간단체 대표들이 전주지역 생활임금제 정착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생활임금은 물가상향 등을 고려하고 노동자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기 위해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되며, 생활임금제가 정착될 경우 노동자의 평균적인 삶의 질 향상과 그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전주시는 27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소순명 전주시의회 의원, 노동계, 경영계, 민간단체 대표 등 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노사민정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위원들은 고용노동부의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 계획과 노사민정분과위원회

구성 등 노사민정협의회 상정 안건을 심의하고 협의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2부 순서로 '전주시 생활임금 활성화 토론회'도 진행됐다. 이번 생활임금 활성화 토론회에서는 협의회 위원인 체준호 전북대 교수가 발제하고, 노동계와 경영계, 민간단체 대표 등 6명 노사민정 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전주시 생활임금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또, 전북대 노사관계전문과과정 교육생 30명 등도 토론회에 참여해 생활임금에 대해 귀를 기울였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노사민정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한 후 총 5차례의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노사

민정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로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의제 발굴을 위해 활발한 논의를 해왔다.

특히 전주지역 노·사·민·정 대표들은 지난해 8월에는 신뢰와 협력의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다짐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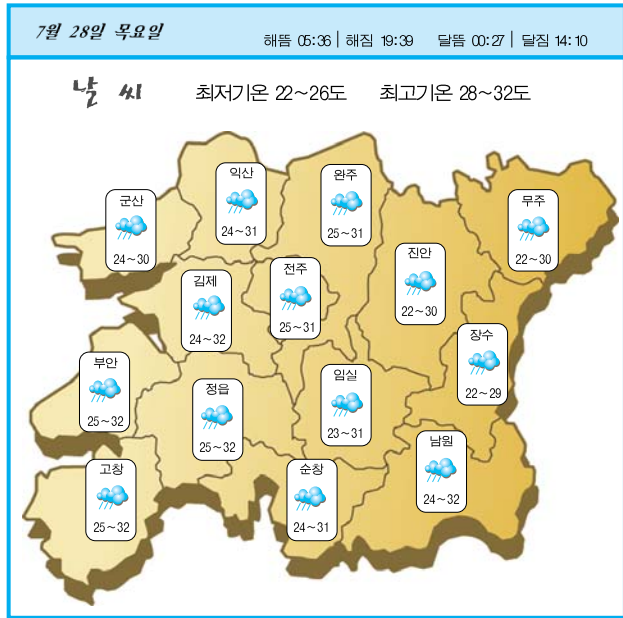
협의회는 또 지난 2월에는 고용노동부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올 하반기 중 공정일터 만들기 컨설팅과 노사민정 활성화 교육 및 워크숍 등의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지역의

노·사·민·정 모두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풍토를 만들고, 한마음 한뜻으로 노동시장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을 위해 뜻을 모아나가자"고 했다.

또한 "모든 시민들이 일터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4년 10월 '생활임금 조례'가 전주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최저 임금을 교통, 주거, 교육비용 등을 고려해 법정 최저 임금보다 높은 적정임금을 책정해 보장해주는 생활임금제를 전북지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사드 배치 두고 엇갈린 찬·반 여론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두고 시민들의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27일 일부 시민단체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기자회견과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불입한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사드 배치를 지지하는 결의대회가 열렸다.

성주유원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청운동주민센터에서 사드 배치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안보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국가는 국민에게 안전을 지켜줄 의무가 있다"고 목적을 높였다.

민주주의국민행동도 이날 오전 11시 국회의원관 제2소회의실에서 사드 반대연료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여론 수렴 과정도 없었고 성주 주민들에 대한 설명 과정도 없었으며 환

경영향 평가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향군인회는 국방부 앞에서 사드 배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1인 시위에 참여했다.

이들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사드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자유총연맹도 이날 오후 2시 세종로소공원 앞에서 사드배치 지지 결의대회를 열고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을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를 지키기 위한 군사주권 차원의 전략적 선택으로 인식, 이를 전폭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사드 배치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500만명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대안임을 설득하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고 공언했다.

원광대, 국내 대학 최초 ISO 26000 인증 획득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

보고서 평가 통해 선정된 대학특성화·교육 전문성·학생서비스 등 7대 핵심 이슈 중심으로 구성

심사결과 'IV' 최고등급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종)가 국내 대학 최초로 국제 가이드라인인 GRI G4 평가기준을 충족한 ISO 26000(사회적 책임 국제 표준) 인증을 획득했다.

원광대는 ISO(국제표준화기구)에서 인정한 기관으로부터 검증 받아 정보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돼 심사 결과 I~IV단계 중 최고 단계인 'IV' 등급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원광대는 사회적 책임 이행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내·외부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개교 이래 처음으로 지속가능 경영 성과를 담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이 첫 번째 보고서가 개교 70주년을 맞이한 해에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더욱 뜻 깊게 평가하고 있다.

원광대가 이번에 ISO 26000 인증을 획득한 보고서는 학교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중대성 평가를 통해 선정된 ▲대학특성화 ▲교육 전문성 ▲학생서비스 ▲상생협력 ▲사회공헌 ▲그린캠퍼스 조성 ▲대학 경쟁력 강화 등 7대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한 변화된 대학 환경 요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지역과 사회, 나아가 세계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덕진공원 최종보고회 전주시는 27일 전주시청 시장실에서 덕진공원 대표관망지 조성사업에 대한 최종 용역 결과보고회를 열고, 천년시량독립 시업 등 관광기반사업과 관광진흥사업 등을 최종 확정했다.

감당하기 위해 원광대가 수행하는 지속 가능한 노력과 성과들을 소개하고 있다. 김도종 총장은 "그 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통해 원광대의 더욱 투명한 운영과 더불어 지역과 사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8월 1일부터 실업크레딧제도 시행

다음달부터 구직급여 수급자는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정부로부터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실업크레딧 제도'를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구직급여 수급자들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아 실제 기간에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되고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실직 전 3개월 간 평균

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인정소득)이 70만원인 경우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국민연금 보험료 중 본인부담분(25%)인 약 19만원을 납부하면 정부가 나머지 연금보험료(75%)인 약 57만원을 지원해준다.

실업크레딧 지원대상은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다.

금융·연금 소득·토지·건축물·주택 등 재산이 많은 고소득·고액 재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기간은 최대 1년이다.

구독·광고문의 288-9700